

게임 BGM 저작권 침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하나의 저작물로 평가된다. 게임의 배경음악(BGM)의 경우에도 게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게임을 위해 별도로 창작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제작자 등이 다른 저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게임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A사는 자신이 출시·유통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일부 장면에서 저작자인 B의 음원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B가 문제를 제기했고 A사는 해당 음원을 해당 게임에서 삭제했으나 그 삭제 시점까지 해당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이 문제됐다.

먼저 해당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혼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도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가 인정됐다.

다만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기간(5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기간(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

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A사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B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B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게임의 배경음악 등과 같이 계속적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일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 시효 완성의 가능성성이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

세종시 르네상스



기자 수첩

김연세
(정책사회부)

"대전을 행정부 수도로 만들겠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 대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 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

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루몬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게임 및 파면으로 인해 다

시도 이전이냐, 용산 진류나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명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 있다. 용산에 남아야겠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에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kys@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금을 찾아서



황금만능 시대는 언제부터일까? 옛부터 사람들은 돈을 쫓아 헤맸다. 선사시대에는 더 많은 짐승을 사냥해서 그 고기와 가죽을 얻고 뼈로는 무기를 만들어 더 용맹해짐을 재산으로 여겼다. 그러다 곡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저장의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각각의 산지에서 나는 고유한 먹거리나 필수품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물물거래를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믿을 수 있고 간편한 교환수단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화폐 탄생의 이유가 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곡식 같은 농산물은 물론 소금이나 조개껍질 같은 것이 재화의 교환수단이 된 것이며,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나라에서 신용을 담보하는 동전이나 엽전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라마다 자국의 화폐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화폐들의 국제거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금본위 제도가 생겼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일련의 대처를 정부 효율 부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미국 켄터키 폭스노스 지하 금고에 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세계 금값이 출렁거렸다.

미국은 세계 제1위 금 보유국으로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8,800만톤의 금이 바로 켄터키 폭스노스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내용만으로도 세계 금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필자의 앞선 글에서도 은행의 탄생에 관한 배경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럽이 은행 탄생의 선조가 된 것도 중세 이후 제국주의가 발현되면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 상대적 재화거래의 안정성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을 대체할 만한 실물가치를 대변하는 재화는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줄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9			6				9
9						3					
7		2	6				4				
4	6										
		8						5			
4											
	5										
1											

경향형 스도쿠
컬러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할인서

4				9			7	8
5		7		4				
1	3							
5								
9	2							
2	7	6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인쇄인	편집국장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6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75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